지방자치 20년 대전도시계획 변화와 발전방향

김흥태 도시기반연구실장

Ⅰ. 서론

195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개원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함으로써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고 2011년 4월 15일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도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1년 대전의 인구는 1,082,508명이었으나, 2011년 6월 말 현재 1,509,963명으로 지난 20여 년간 무려 39.5%의 매우 높은 인구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도시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지방행정도 행정기관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개발연대를 지나 도시성장의 안정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도시계획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집행방식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다양하게 변화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 · 복지 · 문화 분야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와 시민사회 역할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계획은 그 목표나 운용 면에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화 ·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시정책과 관련된 권한이 점차 분권화되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좀 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도시계획의 구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제까지의 도시계획과는 다른 주민주도, 시민본위의 참여형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대전의 도시계획 변화와 앞으로의 도시계획 방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글의 내용은 우선 1990년 이후 대전의 성장과 변화를 검토하고, 도시계획의 특성과 변화를 대전의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식과 대전 도시계획 변천사, 그리고 민선시대의 도시정책 특성을 제시한 후, 미래 대전의 도시계획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급격한 도시성장과 발전을 경험한 대전이 미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성찰의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Ⅱ. 대전의 성장과 변화

1. 인구·가구수의 성장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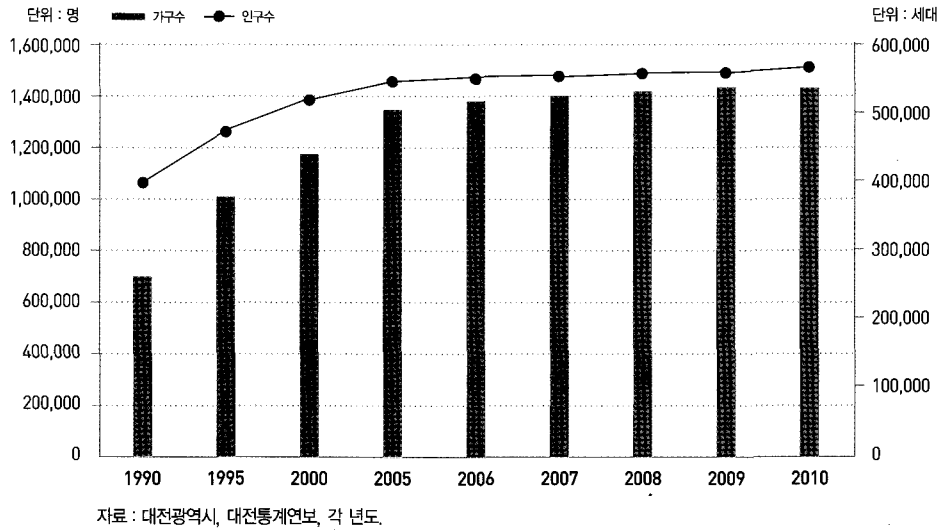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 이후, 대전은 급격한 도시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에도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다. 인구는 1990년 1,062,084명, 2000년 1,390,510명, 2010년 1,518,540명으로 최근 20년 동안 456,456명이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2.15%로 타 대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가구는 1990년 262,224세대, 2000년 439,312세대, 2010년 536,297세대로 최근 20년 동안 274,073세대가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5.23% 수준으로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히 괄목할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표 1] 대전시 인구 및 가구수 변화추이

단위 : 명, 세대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 구	1,062,084	1,268,432	1,390,510	1,462,535	1,475,961	1,487,836	1,495,048	1,498,665	1,518,540
가 구	262,224	379,121	439,312	505,650	518,039	525,880	531,682	538,100	536,297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1] 대전시 인구 및 가구수 변화 추이도

2. 교통시설의 성장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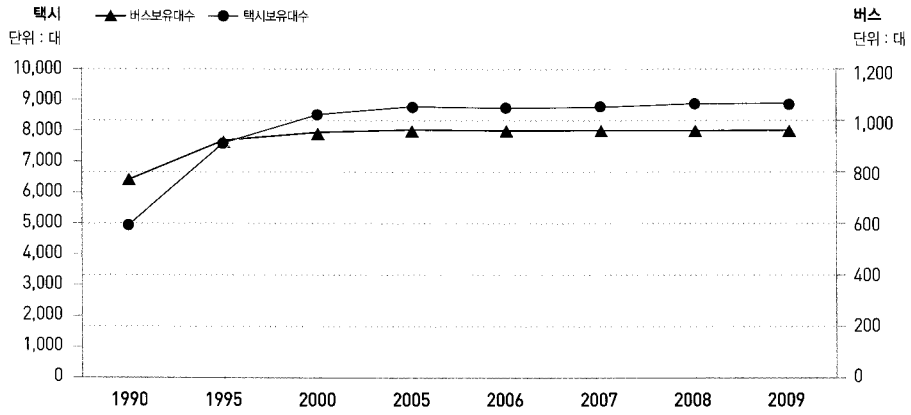
교통시설의 변화로 버스보유대수는 1990년 775대, 2000년 957대, 2009년 965대로 최근 19년 동안 190대가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1.29% 수준이다. 택시보유대수는 1990년 4,946대, 2000년 8,514대, 2009년 8,874대로 최근 19년 동안 3,928대가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4.18% 수준으로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1993년에 개최한 대전엑스포 '93 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만인당 교통서비스인구는 2000년 이후 버스는 6.9대, 택시는 61.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교통시설 변화추이

단위 : 대, 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버스보유대수	775	933	957	965	965	965	965	965
택시보유대수	4946	7,601	8,514	8,772	8,757	8,807	8,874	8,874
서비스인구(버스)	7.3	7.4	6.9	6.6	6.5	6.5	6.5	6.4
서비스인구(택시)	46.6	59.9	61.2	60.0	59.3	59.2	59.4	59.2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2] 버스 및 택시보유대수 변화 추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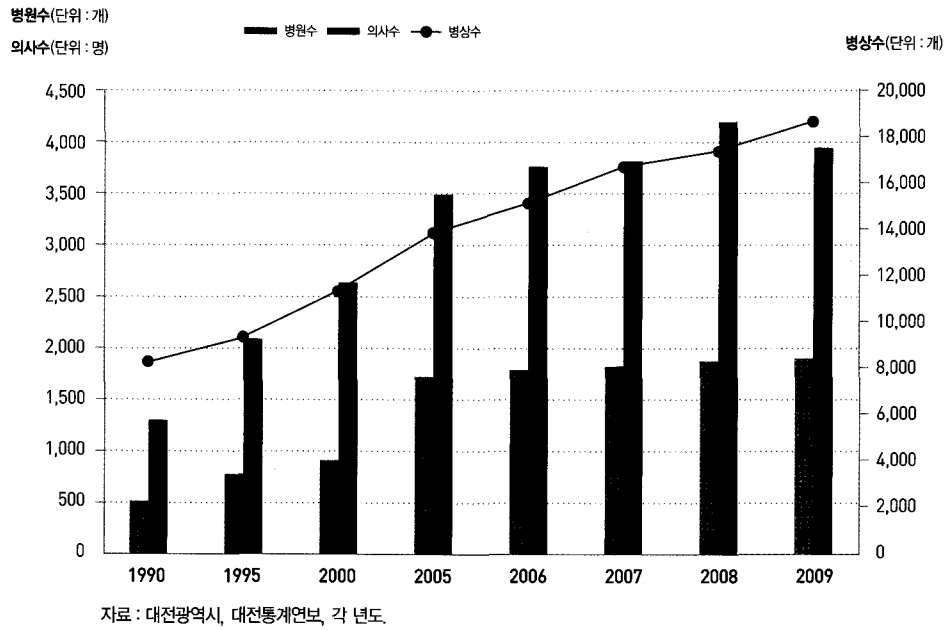
의료시설의 변화로 병원수는 1990년 525개, 2000년 931개, 2009년 1,918개로 최근 19년 동안 무려 1,393개가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13.96% 수준이다. 의사수는 1990년 1,304명, 2000년 2,651명, 2009년 3,959명으로 최근 19년 동안 2,655명이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10.72% 수준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상수는 1990년 8,412개, 2000년 11,388개, 2009년 18,683개로 최근 19년 동안 무려 10,271개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6.43% 수준이다.

한편 만인당 의료서비스인구는 의사가 1990년 11명, 2000년 19명, 2009년 26명으로 점차 높아졌고, 병상수는 1990년 79.20개, 2000년 81.90개, 2009년 124.66개로 점차적으로 높아져 의료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의료시설 변화추이

단위 : 개, 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병원수	525	795	931	1,737	1,799	1,841	1,884	1,918
의사수	1,304	2,102	2,651	3,516	3,784	3,833	4,205	3,959
병상수	8,412	9,413	11,388	13,930	15,218	16,698	17,421	18,683
서비스인구(의사)	12	17	19	24	26	26	28	26
서비스인구(병상)	79.20	74.21	81.90	95.25	103.11	112.23	116.52	124.66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3] 의료시설 변화 추이도

Ⅲ. 대전 도시계획의 특성 및 변화

1. 시민의식을 통해 본 대전의 도시 미래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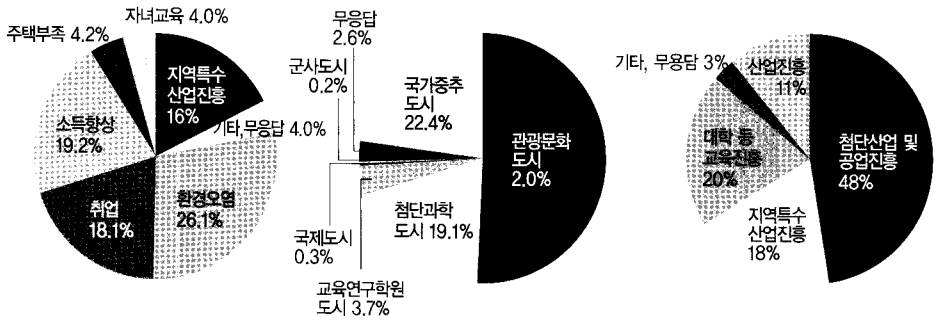
1) 1995년 대전의 도시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식

대전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은 1983년에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당시 계획인구(2001년)는 165만명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의식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실시한 시민의식조사는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인 교육, 환경, 취업, 소비와 저축, 교통, 주거 등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 도시인구 126만명 규모의 대전시가 안고 있던 심각한 도시문제로는 환경오염(26.1%), 소득향상(19.2%), 취업(18.1%), 지역특수산업진흥(16%), 주택부족(4.2%), 자녀교육(4.0%) 순으로 대체로 환경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행정구역내 거주시민, 공무원은 대전이 가진 도시의 성격 및 미래상은 교통

중심도시(49.7%), 국가중추도시(22.4%), 첨단과학도시(191.%)순이었으며, 장래 대전의 발전방향은 첨단산업 및 공업진흥(48%), 대학 등 교육진흥(20%), 지역특수산업진흥(18%)으로 산업과 교육의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심각한 도시문제] [도시의 미래상] [장래 발전방향]

한편 중학교 3학년은 장래 20년 후 희망거주지로 기성세대와는 달리 대전시 거주선호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향후 대전시의 도시성격으로는 첨단과학기술도시(30%), 교통의 중심도시(25%)%, 관광문화도시(13%), 교육연구학원도시(11%) 순으로 나타났다.

2) 2001년 대전의 도시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식

국가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대전의 위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에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2020년 대전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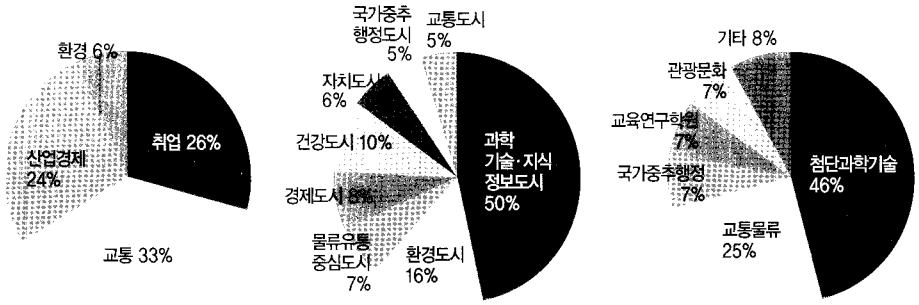
당시 도시인구 140만명 규모의 대전시가 안고 있던 당면한 도시문제로는 교통 · 취업 · 산업경제부문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역시 경제문제는 대전시가 풀어야 할 도시문제 중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연구시설을 활성화하거나 첨단과학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과학기술 · 지식정보도시로서의 미래 대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대전시의 도시성격은 대덕밸리 조성이라는 시의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되어 첨단과학기술이 4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교통물류 25%, 국가중추행정과 교육연구학원,

관광문화가 각각 7%를 보였다.

2020년 대전시 도시 미래상 설정시 들어가야 할 용어로는 과학 기술 · 지식정보도시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쾌적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5%, 물류유통중심도시 12%, 튼튼한 경제도시 11%, 안심하고 건강한 도시 9%, 인간중심의 자치도시 6%, 국가중추행정도시와 교통도시가 각각 5%순으로 나타나 역시 과학기술과 환경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전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대학 · 대덕연구단지 등 교육 · 연구시설 활성화에 의한 발전이 3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첨단과학산업육성에 의한 발전이 29%, 관광문화진흥에 의한 발전이 16%, 국가중추행정진흥에 의한 발전이 1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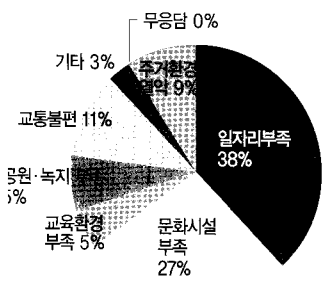
[심각한 도시문제] [도시의 미래상] [장래 발전방향]

3) 2010년 대전의 도시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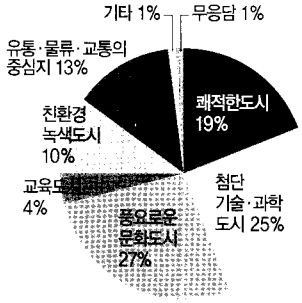
민선 5기 들어 대전은 인근의 세종시 건설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의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어, 대전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전의 도시문제와 장래 미래 도시상은 다음과 같다.

도시인구 151만명 규모의 대전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는 일자리 부족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시설 부족 27%, 교통불편 11%, 주거환경 열악 9%, 공원녹지 부족 7%, 교육환경 부족 5% 순으로 나탔으며, 대전의 미래 도시상으로는 풍요로운 문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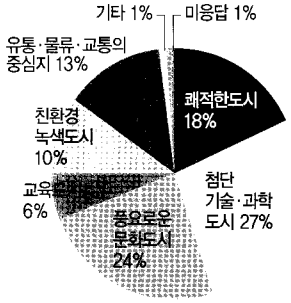
27%, 첨단기술 · 과학도시 25%, 쾌적한 도시 19%, 유통 · 물류 · 교통의 중심지 13%, 친환경 녹색도시 10%, 교육도시 4%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미래 도시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 방향은 첨단기술 · 과학도시 27%, 풍요로운 문화도시 24%, 쾌적한 도시 18%, 유통 · 물류 · 교통의 중심지 13%, 친환경 녹색도시 10%순으로 중점추진 방향에서는 문화도시보다 첨단기술 · 과학도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전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심각한 도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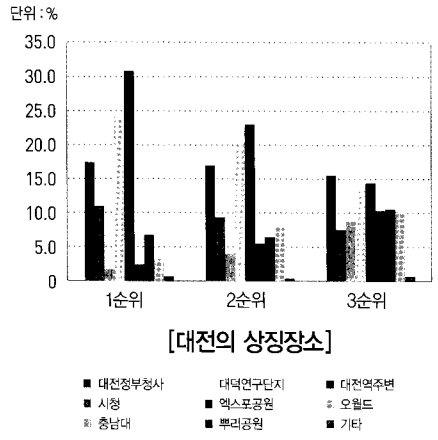


[도시의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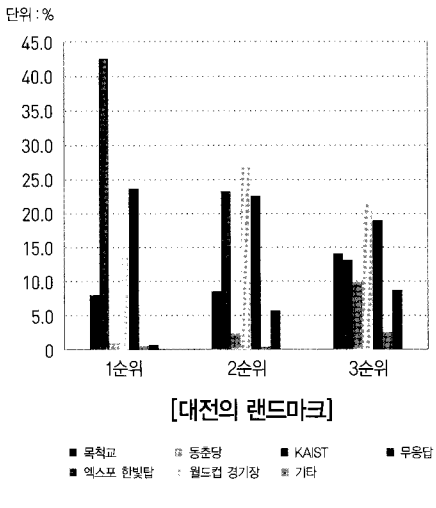


[장래 발전방향]

한편 시민들이 느끼는 대전의 상징장소 제1순위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가장 높았고, 대덕연구단지, 대전정부청사, 시청, 대전역 주변 순으로 나타나, 역시 엑스포공원은 대전의 상징장소로서의 이미지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전의 랜드마크로는 엑스



[대전의 상징장소]



[대전의 랜드마크]

포한빛탑, KAIST, 월드컵경기장, 목척교 순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민들은 엑스포한빛탑을 대전의 랜드마크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대전도시계획의 변천

1) 대전도시계획 연혁

대전시는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승격하며 대덕군을 편입하여 5개 자치구에 행정구역 면적 537.25㎢에 인구 105만 명의 대도시가 되었다. 이로써 대전은 명실상부한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91년에 변화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계획목표년도 2001년, 계획인구 165만명을 설정한 대전도시기본계획변경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이때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대전시 도시계획구역에 연기군 및 금산군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562.35㎢이었으며,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은 여전히 불일치한 상태였다.

1993년 서남부권 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이루어졌으며, 1993년 말 대전의 행정구역 면적은 539.854㎢이고,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은 557.302㎢(계룡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논산군 두마면 지역 제척 및 구적오차 수정에 따른 변화)이다. 1993년 EXPO 이후 EXPO 국제전시구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1996년 목표연도 2016년 계획인구 210만명의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대전시 행정구역내 비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일치를 도모하였다. 당시 기존 도시계획구역 면적(555.668㎢)과 대전시 행정구역내 비도시계획구역(44.7432㎢)을 합하여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은 600.411㎢가 되었다. 1989~1999년 사이에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건설부장관 및 시장의 위임사항에 대한 반영을 위하여 5차례의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어왔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대전시는 주변지역(충남, 충북)과의 공동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였고,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2009년에 수정 작성하였다.

이들 계획에서는 공간구조를 단핵에서 다핵으로, 교통망구조는 방사형에서 격자와 순환방사의 혼합형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심은 기존도심과 둔산도심 2개로

하여 기존도심은 대생활권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둔산도심은 국가행정중심기능 및 도시의 상업·업무·금융 등의 중심지로써 조성토록 계획하였다. 부도심의 유성은 관광, 위락,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진잠은 물류중심지로, 신탄진은 도시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코자 계획하였다. 특히, 시 외곽의 노은지구 개발과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에 힘입어 도시의 발전축을 서북축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7월 출범하게 될 세종시의 개발축과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 한편, 생활권에서는 자연현황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기존 7개 생활권에서 6개 생활권으로 대별하고 신탄진, 유성, 둔산, 송촌, 진잠, 보문 등 6개의 대생활권과 20개의 중생활권 등의 생활권으로 구성 체계를 대폭 변경하였다.

[표 4] 직할시·광역시 시대의 도시계획 연혁

결정년월일	고시기관	고시번호	주 요 내 용
1991. 01. 15	건설부	-	•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 목표년도(2001), 계획인구(165만인)
1991. 07. 06	대전직할시	62	• 도시계획재정비(시장 위임사항)
1991. 12. 30	건설부	875	• 도시계획재정비(건설부장관 결정사항)
1991. 12. 31	대전직할시	134	• 도시계획재정비(시장 위임사항)
1992. 04. 03	건설부	153	• 도시계획재정비(건설부장관결정사항)
1992. 05. 07	대전직할시	54	• 도시계획재정비(시장 위임사항)
1992. 06. 19	대전직할시	73	• 도시계획재정비(시장 위임사항)
1993. 09. 16	건설부	-	•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 서남부생활권 개발기본계획 반영
1994. 04. 07	건설부	-	•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 EXPO 국제전시구역 용도변경
1996. 12. 18	건설부	-	•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 목표연도(2016), 계획인구(210만인)
1999. 03. 07	대전광역시	26	• 도시계획재정비(1차분) • 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
1999. 07. 09.	대전광역시	80	• 도시계획재정비(2차분) • 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
2006. 09. 01	대전광역시	-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목표연도(2020)
2007. 08. 27	-	-	• 도시관리계획변경 • 대전관저5,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2008. 02. 22	건설교통부	77	• 도시관리계획변경 • 개발제한구역 해제
2010. 01. 29	대전광역시		•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백서, 2010.

이와 같이 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 대전시의 도시계획은 크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재개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세 차례나 수립될 정도로 대전발전의 격동기 시대로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대전권광역시도시계획은 국토 및 도시계획의 제도 변화로 인하여 이 때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광역시도시계획은 도시성장과 도시기능의 분화로 기존의 도시경계를 뛰어넘어 도시주변의 넓은 범위에 도시의 기능과 활동이 확산되면서 형성되는 중심도시(central city)와 그 주변지역(fringe)을 포함한 공간영역으로 대전을 중심도시로 한 충남의 2개 시, 2개 군, 1개 출장소와 충북의 1개 시, 3개 군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의 미래상으로는 국가중추행정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도시권역, 도시 · 지역간의 균형발전된 권역,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갖춘 권역

[표 5] 지방자치 이후 주요 도시계획

단위 : ㎢, 명

구 분			면 적	목표인구	목표년도	주 요 내 용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2005. 01	4,634	195만	2020년	2010년 1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변경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2001 대전도시기본계획**	1991.01	562.35	165만	2001년	상위계획과 여건변화에 의해 도시 기본계획 수립 1993년 서남부권 개발기본계획 반영 1993년 EXPO 용도 변경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	1997. 1	600.41	210만	2016년	199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변경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 일치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2006. 12	539.73	200만	2020년	도시계획구역과 계획인구 변경 여건변호에 따라 계획내용 일부 변경
도시재정비계획	**1992 도시재정비계획**	1992. 06	557.3	-	2001년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도시 개발사업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1999 도시재정비계획	1999. 07	557.68	-	2006년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도시 개발사업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정비계획	**1992 도심재개발기본계획**	1992	-	-	2001년	대전역 주변의 도심지역, 서대전역과 계백로 주변 지역 대상
	201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2006. 06	-	-	2010년	정비예정구역 202개소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백서, 2010.

으로 설정하고, 미래 대전권의 발전목표는 지식정보거점도시권의 구현으로 자립경제기반 구축, 도시 · 지역별 적정기능배분과 충청권의 균형발전 도모,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관리와 계획적인 도시공간구조 구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적정관리 · 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한 대전광역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2) 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구조계획 변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인 도시의 정책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 운용하고 있다.

1983년 최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991년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1993년 서남부생활권 개발기본계획 수립, 1994년 EXPO 국제전시구역용도변경, 1997년과 2006년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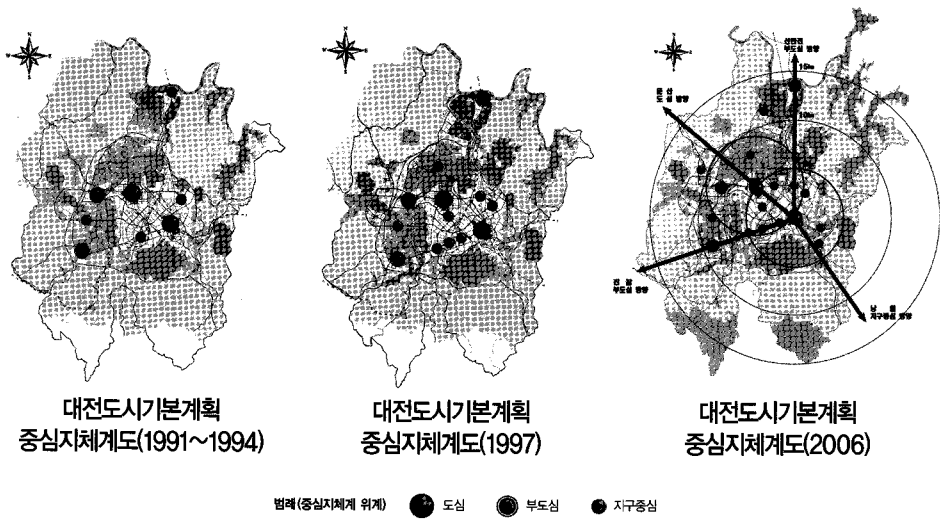
[표 6]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구조 계획 변천

계 획	중심지체계	주요 공간계획	주요시책
2001년을 향한 대전도시기본계획 (1983. 12)	2도심 3핵지구	- 대전시가지와 유성과 진잠지역 일체화 도시기능의 다양화 • 대전도심 : 상업중심 • 신도심 : 행정, 금융, 상업업무	대덕, 유성 통합, 대도시 성장
대전도시기본계획(1991. 1) 2001년 대전전도시 기본계획변경(1993. 9) 2001년대전도시 기본계획변경(1994. 4)	2도심 2부도심 4지구중심	- 단핵중심체계에서 다핵구조 개편 - 4개의 핵과 2개의 특수기능 • 기존도심 : 상업기능 • 둔산신도심 : 중앙행정기능 ※ 서남부생활권개발기본계획 반영(1993) EXPO 국제전시구역 용도 변경(1994)	• 도심의 균형적 배치 • 격자형 및 순환방사형 도로망 체계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 (1997. 1)	2도심 3부도심 8지구중심	- 다핵중심체계 및 편리한 격자형도로망 체계 구축 - 도시공간구조 위계를 도심, 부도심 지구 중심으로 구분, 중심지별 성격 및 기능 부여 • 기존도심 : 광역교통 및 고차적 상업서비스 중심지 • 둔산신도심 : 행정, 업무, 금융의 중심지	• 다핵도심 구조 도시균형발전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2006. 12)	2도심 3부도심 13지구중심	- 다핵 중심체계 형성 격자형 도로망체계 구축 - 도시공간구조 위계를 도심, 부도심 지구 중심으로 구분, 중심지별 성격 및 기능 부여 • 기존도심 : 광역교통 및 일반업무 중심지, 동남부지역의 거점 • 둔산신도심 : 행정, 업무, 금융의 중심지	• 균형발전 부도심 개발 •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 지역중심개발

자료 : 대전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 설정의 주요사항을 발췌 재정리 함.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공간구조는 1983년 처음 도시기본계획수립 당시는 2도심 3핵지구로 계획하였으나, 1991년 이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2도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고, 1997년에 2도심 3부도심 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대전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설정된 공간구조의 중심지체계는 2001년에는 2도심 2부도심 4지구중심 2016년의 대전도시공간구조의 중심체계는 2도심, 3부도심, 8지구중심이며, 2020년 대전도시공간구조의 중심지체계는 2도심, 3부도심, 13지구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외연적 확산과 더불어 중심지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 체계 변화도

3)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가지 구역 안에서 미개발된 시가지의 일정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정율의 토지를 공평하게 무상 제공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당해 사업시행지 내에 필요로 하는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잔여토지의 전부는 권리관계의 변동 없이 공공시설에 맞추어 구획, 지목 또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기 종전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을 기준으로 환지하는 개발방식이다 (대전광역시, 1994).

1990년대 이전 까지는 대전의 시가지 형성은 주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추진된 도시개발사업 면적인 3,474천㎡이며, 이중 동구 3개 지구, 중구 2개 지구, 서구 2개 지구, 그리고 유성구 3개 자구로 주로 동구와 유성구에서 추진되었다.

[표 7] 지방자치 시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지구명	위치	면적(천㎡)	환지방법	감보율	사업비(억원)	시행인가일(년월일)	환지계획 인가일(년월일)	환지처분일(년월일)	시행자
계		3,474			3,671				
자양	동구 자양	250	면적	30.0	3	1977. 02. 28	1977. 09. 23	1985. 12. 30	조합
낭월1	동구 낭월	383	평가	44.8	347	1999. 09. 10	1999. 12. 28	2005. 10. 27	구청장
용운	동구 용운	234	면적	50.6	260	2002. 7. 24	2002. 11.04	2005. 12. 12	구청장
사정	중구 사정	274	평가	46.9	286	1995. 07. 21	2001. 04. 25	-	구청장
안영	중구 안영	256	평가	49.0	198	1998. 11. 03	1998. 12. 05	2003. 01. 17	구청장
흑석	서구 흑석	103	면적	45.04	76	1998. 05. 09	1998. 10. 14	2004. 01. 30	구청장
복수	서구 복수	493	평가	48.2	759	1998. 08. 15	1999. 04. 13	2003. 11. 28	구청장
봉명	유성구봉명	461	평가	49.9	507	1998. 04. 01	1999. 01. 04	2002. 06. 18	시장
교촌	유성구진잠	396	평가	43.7	407	1998. 09. 03	1999. 05. 31	2004. 12. 27	구청장
장대	유성구장대	624	평가	48.7	828	1998. 09. 04	1999. 04. 13	2002. 06. 29	시장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백서, 2010.

4)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택지개발사업은 대전시의 시가지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1990년대에는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대부분 추진되었다. 그 동안 23개지구 7,242천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중 18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4개 지구 1,491천평은 현재 사업시행중이다. 그 중 서남부택지개발지구(도안신도시) 1,320천평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실제로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주택공급계획은 159,973호와 계획인구는 581,004명으로 2010년 1,518,540명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38.2%를 점유하고 있다.

[표 8] 대전시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구명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기간	호수	인구	사업시행자
소 계(22)	19,370	3,154,710			137,021	516,738		
동구 용운	485	8,249	1981. 06. 11	1982. 04. 09	1982. 04~1984. 12	2,460	9,200	토공
서구 내동	93	3,767	1983. 06. 28	1984. 11. 24	1984. 11~1987. 11	330	1,260	토공
중구 중촌	221	16,766	1984. 04. 11	1984. 11. 29	1984. 11~1989. 12	1,140	4,200	〃
대덕 중리1	872	25,350	1983. 06. 28	1984. 08. 20	1984. 08~1987. 09	4,030	14,700	〃
서구 가수원	344	22,465	1984. 09. 17	1985. 08. 20	1985. 08~1988. 01	1,600	6,500	〃
동구 판암	109	9,664	1985. 10. 19	1986. 08. 27	1986. 08~1990. 12	2,146	8,584	주공
대덕 중리	279	3,024	1985. 07. 31	1986. 03. 6	1986. 03~1987. 09	380	1,300	〃
중구 문화	169	49,987	1981. 06. 11	1986. 06. 10	1986. 06~1994. 12	3,161	12,644	주공
서구 둔산	7,451	1,054,680	1985. 04. 10	1988. 03. 30	1988. 03~1994. 12	51,611	206,464	토공
대덕 법동	502	95,660	1989. 10. 14	1990. 03. 08	1990. 03~1993. 03	5,815	23,260	도시공
대덕 목상	139	18,380	1989. 10. 27	1990. 06. 26	1990. 06~1993. 03	1,476	5,166	〃
대덕 석봉	79	12,981	1989. 10. 27	1990. 06. 26	1990. 06~1993. 03	997	3,490	〃
유성 송강	711	87,806	1989. 10. 27	1990. 10. 24	1990. 10~1993. 04	7,878	25,211	〃
서구 둔산	21,253	280,423	1990. 06. 29	1991. 04. 19	1991. 04~1994. 06	4,920	19,680	토공
유성 원내	245	54,468	1991. 12. 10	1992. 12. 22	1992. 12~1995. 11	3,596	14,384	도시공
서구 관저	383	74,115	1989. 12. 29	1993. 11. 17	1993. 11~1998. 03	5,531	22,124	주공
대덕 송촌	1,009	235,565	1992. 09. 04	1993. 12. 08	1993. 12~1999. 06	7,737	30,948	도시공
서구 관저2	585	182,480	1990. 07. 261	994. 09. 07	1994. 09~1999. 06	6,442	25,768	주공
유성 노은1	1,968	423,000	1993. 12. 28	1995. 11. 17	1995. 11~2002. 03	8,689	34,756	토공
대전 관저3	454	150,000	1995. 02. 17	1996. 12. 28	1996. 12~2003. 12	3,510	11,934	주공
유성 노은2	1,575	348,821	1995. 02. 17	1999. 06. 11	1999. 05~2005. 12	9,072	22,115	토공
대전 가오	646	123,920	1996. 04. 24	1999. 12. 29	1999. 12~2006. 09	304,500	13,050	토공
소 계 (1)	6,109	2,996,400	-	-	-	22,952	64,266	-
대전 서남부	6,109	2,996,400	2001. 01. 05	2003. 12. 16	2003. 12~2011. 6	22,952	64,266	LH공사도공
23개소	25,479	6,121,110	-	-	-	159,973	581,004	-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백서, 2010.

최근에서는 기존시가지의 열악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쇠퇴한 도시기능의 회복과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게 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도시활동의 변화가

예상되어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중에 5개의 중심지형은 공간적으로 중심지체계와 밀접한 지역으로, 향후 이들 사업들이 완료될 경우 도시공간구조 변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민선시대의 대전시 도시정책 특성

민선시대의 대전시의 비전과 시정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선 1기와 2기(1995~2002)는 「긍지 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비전 하에 시정방향은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시정목표는 민선 1기에는 '활력있고 잘사는 경제도시', '자족능력을 갖춘 자치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도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 그리고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설정하였다. 민선 2기는 역시 '활력있고 잘사는 경제도시', '미래지향의 비전 있는 도시개발', '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시민과 함께 열린 신경영행정', '대중교통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초록환경도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민선 1기와 2기의 비전과 주요 시정목표가 유사한 것은 시정의 최고의사결정자가 동일한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선 3기(2002~2006)는 「가장 살기 좋은 대전 건설-미래를 여는 시민 세계로 열린 대전」비전 하에 시정방향은 기본적으로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을 위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 모든 행정이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투명행정', 기업가 정신으로 업무효율을 높이는 '경영행정'으로 설정하였으며, 시정목표는 '투명하고 골고루 잘사는 열린도시', '모범자치가 실현되는 분권화도시', '기품있는(격조높은) 문화도시', '교육, 교통, 복지, 환경등 삶의 질 최고도시', '21C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전자도시'로 설정하였다.

셋째, 민선 4기(2006~2010)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함께 가꾸는 대전, 함께 나누는 행복」비전 하에 시정방향은 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으로 '활기찬 도시', 녹색도시 환경 및 편리한 교통으로 '쾌적한 생활', 골고루 잘 살고 마음을 나누는 '정다운 시민'으로 설정하였으며, 시정목표는 지역경제 가치창조, 균형있는 도시발전, 자연

친화 환경조성, 도시교통 체계혁신,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문화자원의 육성발전으로 설정하였다.

끝으로 민선 5기(2010~2014)는 「대한민국 新중심도시 대전-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비전 하에 시정방향은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시정목표는 '첨단경제도시', '삶의 질 최고의 교육 · 문화 · 레저특별시',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 환경도시',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시민행정' 으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에서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활성화가 시정의 중점방향으로 설정되었고, 민선 4기에서는 균형발전을 다양한 정책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민선 3기와 5기에서는 소통을 지역의 거버넌스에 의한 지방행정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Ⅳ. 미래 대전시의 도시발전 방향

1. 도시발전의 패러다임를 선도하는 도시계획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가 해결해야 할 하는 현안과제는 행정기관 중심의 양적 · 물리적 개발환경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중심과 질적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도시환경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기존의 방식보다는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미래대전의 도시계획 방향이 될 것이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2009.8.24)」에 따르면,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 · 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 · 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녹색도시는 지속가능성, 미래지향성, 삶의 질을 포함하는 미래 도시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으로 자리매김 되 는 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구변화 및 소득증대에 따른 주거생활환경의 개선이다.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계층의 다양화에 따른 편익시설 수급의 불균형 조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열악한 기존시가지 주거환경의 개선 및 기초생활시설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원활하고 편리한 이동성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문화의 다양성 증가에 따른 도시정체성의 창출이다. 도시문화의 다양성 증가의 다문화 시대의 도래는 시민들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의 확대 및 도시정체성 개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대하여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는 독특한 경관형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환경의 수로도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경제적으로 성공적이며, 친환경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환경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대전시가 추구해야 할 도시계획의 방향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 통합적인 도시재생계획 추진

도시재생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공간환경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재개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은 불량하거나 낙후한 주거지역 등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시설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일견 도시재생과 비슷하게 볼 수 있으나, 도시재생은 특정공간의 물리적 재편뿐만 아니라, 도시를 에워싼 사회 · 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지구화시대 도시경쟁력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도시의 경제 · 사회 · 환경 전반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의 중추적인 목적은 도심지역의 공간구조 개편,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환경의 개선, 사회적 · 문화적 활동의 장 마련 등을 통해 기존 도심부를 기능적이면서, 쾌적한 도시민의 활동 공간으로 부흥시키며, 나아가 이를 통해 도심부가 도시 및 지역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진 도

시의 경우, 도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기능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별로 필요한 부문이 다르고 향후 발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지원제도, 수법 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물리적 ·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지역주민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간적 범위와 상관없이 장소를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 경제 · 문화 · 환경 등 여러 요소들과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형태, 기능, 사람이 함께 하는 공간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합적(통합적) 용도의 공간개발과 활성화 유도이다. 복합적 용도의 공간개발은 주거 · 상업 · 업무 · 문화 등의 기능들을 일정한 범위 및 공간에 수용하여 개발하는 방법으로 직주근접, 다기능의 용도 수용, 정보 및 커뮤니케티션의 활성화, 문화적 다양성 확립, 토지

[표 9] 선진 주요 국가의 도시재생정책 특성

구분	영 국	일 본	미 국
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사회적 통합, 경쟁력 강화	• 토지가격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 • 낙후한 시가지의 물리적 정비에 의한 경쟁력 회복	•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특성	• 단순한 물리적 재정비가 아닌 종합적 재활성화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으로 전환 • 도시재생 사업의 파트너십을 의무화 : 90년대 이후 지방정부 및 민간의 참여 기회 확대 • 경쟁방식에 의한 보조금 지급 • 사회적 약자 고려	• 경제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 중앙 집권형 도시재생 : 중앙정부 주도하에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시행 • 민간 도시개발사업자를 위한 특례 조치	• 커뮤니티 역량 강화 및 경제적 · 사회적 재생에 중점 • 노후불량 주택의 전면철거재개발을 통한 물리적 재정비에서 도시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관점 변화 • 지방 분권적
수법	• 다양한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 • 사업규모 : 개별 건축물부터 도시전체 재생 • 수법의 예 : 업무개량지구, 도심활성화, 브라운필드 재생 등	• 접근방식의 이분화 : 도시재생종합정비사업, 도시개발활성화사업 등 사업중심지역관리차원의 마치즈쿠리 종합지원사업 • 사업규모 : 도시재생긴급지역, 마을단위재생사업 등	• 다양한 수법 • 장소 중심적, 통합적 관점의 재생 :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 •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재생 : 역사지구, 보전지구 •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엠파워먼트 존

자료 : 맹다미(2011)

이용의 효율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기능과 용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도시설계적 접근방식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도시의 중심기능이 둔산도심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쇠퇴함으로서 도시 내 중심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도심권에 상업 · 업무 · 문화기능을 정책적으로 보완하여 원도심권의 중심기능 강화를 통해 도시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조하고, 중심지별로 기능적 전문화 및 자족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원도심권 내에는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 '신흥도시재정비촉진사업', '선화 · 용두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주도 3대 촉진사업과 민간주도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 간에는 연계 · 통합보다는 사업중복으로 인한 경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단위사업 등을 연계하여 원도심권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중추기능 확충뿐만 아니라 고용기반, 생활공간, 지역활력 등 소프트웨어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차원의 접근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권역별 전문화를 통한 분산적 집중형 도시공간구조 실현

대전시는 1989년 직할시 승격을 계기로 주변의 대덕군의 중심지(읍)인 신탄진지역을 흡수하면서, 기존의 도심지역과 유성지역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다중심 도시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후 도시의 장기비전인 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심지위계를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을 설정하여 다핵적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일관된 공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심지간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 및 배후권의 불균형과 부도심의 기능적 위상이 취약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층적 중심지체계의 단일 중심권보다는 중심지 간 연계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중심지의 권역화로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중심지체계의 권역화 및 특성화를 통한 도시 전체적으로 중심지간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김흥태, 2010).

우선 원도심권은 기능적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고차상업 및 교류의 중심지」로 특

성화하고, 공간적으로 인근의 오류, 유천, 판암, 낭월, 용전, 중리 등의 지구중심지와 기능적 연계를 통한 배후기능을 강화하여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재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둔산도심권은 기능적으로 「과학기술과 연계한 국제교류 및 업무의 중심지」로 특성화하고, 공간적으로 인근의 대덕연구개발특구인 도룡, 오정, 용문 지구중심지와 연계하여 국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성부도심권은 기능적으로 「온천과 과학이 어우러진 건강 · 휴양의 중심지」로 특성화하고, 공간적으로 인근의 노은, 용계 등의 지구중심지와 연계하여 유성관광특구 활성화와 앞으로 세종시 건설에 따른 배후거점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진잠부심권은 기능적으로 「광역교통을 연계한 물류 · 유통 및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특성화하고, 공간적으로 인근의 도마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광역적 기능 강화와 도시의 서부생활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신탄진부도심권은 기능적으로 「생산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산업의 중심지」로 특성화하고, 공간적으로 최근 산업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관평지구와 현재 추진되고 둔곡, 신동, 대동 · 금탄지구 등과 연계하여 도시산업의 중추거점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권역별 전문화 방향에 따른 세부실천 방안으로는 우선 주거단지에서 상업, 업무, 공공, 여가, 문화 등 각종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접근할 때 보행 및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의 수용인구가 커지면 대중교통망의 결절점에 지역중심을 계획하는 것은 분산적 집중형의 공간구조를 형성시키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그린인프라 계획 도입

녹색도시의 실현 수단으로써 그린인프라는 녹지로서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를 바탕으로 도시내에서 녹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에 꼭 필요한 인프라 차원에서의 논의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도시, 국토 차원에서의 토지보존 전략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도시관리 전략이다. 이와 같은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이동근 · 박찬, 2010)

첫째, 그린인프라는 계획수립은 사회, 환경,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탄소저감 잠재력이 높은 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이 충분히 고려된다면 보다 현명한 토지이용계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린인프라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도시 인프라이기 때문에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생태계 다양성 유지, 야생동식물 및 인간의 이동, 장소성, 수변공간 제공 및 수질개선, 도시브랜드 개선, 경제적 기능, 행복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린인프라는 도로, 철도시설과 같은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공공투자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과 같은 인프라 개발은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도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린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린인프라는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린인프라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지금까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대전의 성장발전과 도시계획 특성을 논의하였다. 도시의 발전의 역사적으로 과거와 현재 및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성을 갖게 된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한 도시의 과거의 도시계획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그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미래 도시계획의 과제 및 방향을 정립하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 대전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하는 도시계획이다. 도시내의 녹지를 확충하고 단절된 녹지체계를 연결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내 생물다양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계획적 개발수단으로는 '성장관리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유연한 용도지역제도의 도입'이나 '자족도시 개발개념의 적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적인 삶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공생적 도시계획이다. 도시발전 과정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빈곤층 · 노인층 · 장애자 등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삶의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이다. 도시경쟁력은 도시가 갖고 있는 경제기반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제기반을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식집약적 산업이 도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은 21세기 도시계획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넷째,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이다. 작금의 주민참여는 공청회, 공고 · 공람, 위원회 등을 통한 제한적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실제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형식적이고 통과의례로 간주되어 성숙된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참여과정도 민주화하여 바람직한 계획수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 대전의 발전상은 보다 인간적이며, 환경성, 역사성, 문화성, 심미성 등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도시가 가꾸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 2008.
-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 2009.
- **건설교통부 외,**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2005.
- **김정곤 외,**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시범도시 구상」, 토지주택연구원, 2010.
- **김태경,** 「창조도시이론과 미래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 **김흥태,** 「도시공간구조 변화분석을 통한 대전시 다핵화 전략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0.
- **대전광역시,** 「대전토지구획정리백서」, 1994.
- **대전광역시,**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 1997.
- **대전광역시,**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2006.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2008.
-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시티 대전 추진전략」, 2010.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백서」, 2011.
- **대전광역시,** 민선 5기 비전 대한민국신중심도시 대전, 2010.
- **맹다미,** 「지역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능순응형 도시재생수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 **왕광익,**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이동근 · 박찬,** "도시를 살리는 그린인프라",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기술전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 **임윤택,** 「국토 및 공간계획 : 법규와 적용」, 토문출판사, 2008.
- **조명래,** "지구화시대 경제사회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중요성", 「월간국토」, 305호, 2007.